

상생 행보와 과시 정치... 지역 국회의원 엇갈린 국감 행보

조인철 의원, 과방위 위원들 첨단 3지구 초정 AI 현안 해법 논의
정준호 의원, SRF 중재 실패 등 지역 협의 배제한 독자 행보 눈총

최근 진행중인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광주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의 엇갈린 행보가 지역민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지역의 현안사업을 국회 상임위원들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국책사업을 광주시로 유치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정치적 성과 과시'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서다.

광주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인 조인철(서구 갑) 의원은 최근 과방위 전체 위원들을 직접 '광주 현장'으로 끌어들이며 지역 정치인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최근 광주시의 현안사업인 국가 인공지능(AI)컴퓨팅 센터 광주 유치를 위해 여야를 막론한 과방위 소속 전체 의원을 광주 첨단 3지구로 초청했다. 국가AI데이터 센터 등을 둘러보는 자리에서 지역 현안을 직접 확인하고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는 단순한 현장 방문을 넘어 지역구 의제를 국회 전체 의제로 격상시키는 동시에, 여야 의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는 협치의 리더십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는다.

반면,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소통과 내부 협의의 절차를 건너뛴 채 보여주기식을 반복하는 정준호(북구 갑) 의원에 대해서는 따가운 눈총이 쏟아지고 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SRF 갈등 중재, 제주항

공감사 백서 등 굵직한 현안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충분한 소통과 내부 협의 절차를 건너뛴 채 '보여주기식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은 신속한 해결과 재정 지원 확대를 외치지만, 정작 광주시와의 사전 정합성 점검과 이해관계자 조율이 빠지면서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린다는 것이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는 2015년 2762억에서 2023년 7900억으로 불어났다. 주거지 소음과 안전 기준을 반영해 방음벽 대신 방음터널 12개소가 새로 반영되며 약 3400억이 증액된 것이 주된 요인이다.

정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부 분담 확대 필요성을 공개 요구했고,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부터 "방음터널 비용 분담 협의 의사"라는 취지의 긍정 신호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재정을 더 끌어오는 성과'처럼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광주시가 세운 둔 협상·예산의 순서가 뒤집어지며 도시 재정 리스크가 커졌다는 게 현장의 우려다.

광주시는 당초 분담 구조를 정부·도로공사와 먼저 재조정된 뒤 예산을 반영하는 '조정 선(先)확정→예산 후(後)반영' 원칙을 세웠다.

분담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면 지방재 부담이 선반영돼 협상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라는 점에 서다.

그러나 정 의원은 앞서 '선 예산 반영, 후 조정'을 문제삼으면서 일정이 꼬였고, 결국 광주시는 지방재 부담만 가중됐다는 지적이다.

SRF(가연성폐기물 연료) 시설 운영 손실 배상금 분쟁에서도 유사한 장면이 반복됐다. 정 의원은 "광주시 간부 요청으로 중재에 나섰다"고 공개하며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광주시는 심판절차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굳혔다.

정 의원은 '정상화'를 강조했지만, 이해당사자 간 절차·역할 분담과 책임 귀속의 설계보다 '내가

해결하겠다'는 메시지가 앞서면서 중재자 중립성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중재를 한다면 양측과 충분히 협의한 뒤 조용히 진행해야 하는데, 조정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오히려 협상 분위기를 해쳤다"며 "진정한 중재가 아니라 정치적 성과 만들기"에 가까웠다"고 비판했다.

앞서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백서 발표 논란도 유가족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성급하게 정치적 메시지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비판을 받았다.

지역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역현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풀어가야 하는데, 정 의원은 이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움직이면서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조인철 의원은 여야 의원들과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함께 풀어나가는 협치를 보여줬지만, 정준호 의원은 일방적으로 성과를 발표하는 독주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전남시국회의가 20일 오후 광주 동구 YMCA 무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례대표 확대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과 투명 공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민주당 공천률 일반 80:당원 20, 비례 30% 확대를”

광주·전남시국회의의 “다수당 감시 장치 복원하자” 제안

광주·전남 시민사회가 더불어민주당 공천·경선률을 대폭 손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시국회의(상임대표 최영태)는 20일 민주당에 경선 참여 비율을 일반 유권자 80% 대 권리당원 20%로 바꾸고,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중을 전체의 30% 이상으로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광주·전남 시국회의에는 지역원로들과 광주전남 민주화운동 동지회, 5·18 공법 3단체, 4·19혁명 공로자회 등 3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요구의 골자는 '인준투표'로 굳어진 지역 선거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시국회의는 권리당원 중심의 경선 체계가 후보 경쟁을 반쪽으로 만들고, 지방의회 견제 기능을 마비시킨다고 진단했다.

실제 광주시의회는 2022년 선거에서 전체 23석 중 22석을 민주당이 차지했고, 현재도 압도적 다수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시국회의는 “경선의 문턱을 낮추고 비례 의석을 넓혀 다당 견제 최소 장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시국선언은 사·도지사, 기초단체장 경선에서 일반 유권자 반영 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해 권리당원 20%와 분리 집계하라고 요구했다. 또 지방의회 선거는 비례대표를 전체 의석의 30% 이상으로 늘려 단체장과 다수당을 감시할 장치를 복원하자고 제안했다.

광역·기초의회 후보 공천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여론조사와 심사 기준에서 일반 유권자의 의사를 우선 반영할 것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출마 준비와 유권자 검증을 위해 지방선거법과 민주당 공천 방식은 최소 선거 6개월 전까지 확정·공고하되, 이번 선거는 12월 중순까지 로드맵을 확정해 알리라는 시한도 못 박았다.

시국회의는 지역 선거의 '경쟁 실종'이 지역 정치의 질 저하로 직결됐다고 지적했다. 호남에서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관행은 후보자 자기 단련을 느슨하게 만들고, 중앙 정치에서도 지역 대표성의 무게를 약화시켜 왔다는 설명이다.

최근 몇 년간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호남 지역구 중진이 부재했고,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 중 7명이 초선이라는 점도 경쟁 부재의 결과로 제시했다.

실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광주의 평균 투표율은 33.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저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국감 브리핑

정진욱 “웨스팅하우스 사태 뿌리는 8년전 국힘”

더불어민주당 정진욱(동남갑) 국회의원은 20일 한국수력원자력·한전에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체결한 타협협정에 대해 “이 사태의 뿌리는 8년전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있다”며 “당시 국민의힘이 잊지도 않은 '기술자립'이라는 거짓 논리로 국민을 호도한 결과 결국 지금의 매국적 협정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전과 한수원은 윤석열 정권 때인 지난 1월 체코 사업 수주에 지식재산권을 이유로 제동을 걸던 웨스팅하우스를 설득하기 위해 원전 17기를 수출할 때마다 1조원이 넘는 규모로 물품·용역 구매 계약 및 기술료를 제공하고, 미국·유럽 등 선진 시장 독자 진출을 포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사실상 '영구 굴욕계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의원(당시 자



유한국당)은 “사우디 원전 수출에는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산업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 “산업부가 그런 허위사실을 올려도 되느냐”고 질타했다”고 밝혔다.

또 “윤 의원은 ‘한전과 한수원으로부터 한국형 원전 APR1400은 100% 기술자립이 완료되어 해외 수출 시 미국의 동의 없이 가능하다’는 자료를 제출받았다”며 “산업부의 설명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당시 윤한홍 의원의 보도 자료 제목은 ‘한전·한수원은 미국 허락 없이도 사우디 원전 수출 가능하다는데 산업부만 미국 승인 필요, 산업부가 원전의 자립 수출 발목잡나?’였다”고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서왕진 “가스공, 1조원 LNG터미널 투자 강행”

한국가스공사가 이용률 평균 30%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LNG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당진 LNG 터미널 2단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이 20일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확보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운영하는 총 5개의 LNG 터미널 전체 기화·송출시설 이용률은 겨울철 성수기에도 최대 42% 수준, 연 평균 27%에 머물러 시설 활용이 절반 이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가스연맹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LNG 터미널의 기화·송출시설 이용률은 33%에 불과하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충남 당진에 6번째 LNG 터미널(2단계)을 신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당



진 LNG 터미널 2단계 사업의 총 투자비는 1조원 규모이며, 지난 2022년 7월 이사회 의결 이후 올해 5월 건설공사 긴급입찰을 공고하고, 8월에는 사업을 낙찰받은 두산에너지빌리티와 건설계약을 체결했다.

서왕진 의원은 “평균 이용률이 30%도 되지 않는 LNG 인프라 설비를 추가로 짓는 것은 명백한 과잉투자, 장기적으로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윤석열 정부 임기 초반에 결정된 사업을 실책설기용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